광주의 40년 염원…“5·18 왜곡·폄훼 끊는 계기로”

전두환 오늘 선고 공판

재판부 헬기사격 판단 주목
올해만 왜곡·폄훼 232건 제보
가짜뉴스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지역사회 힘 모아 진실 알려야

30일 예정된 전두환씨 사자명예 훼손 재판을 앞두고 지난 27일 촬영이 허락된 법정내부 모습, 재판당일 피고인석에 서는 전두환씨는 물론 재판정 촬영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두환씨 선고 재판을 5·18에 대한 왜곡·폄훼를 끊어버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40년을 맞았고 ‘사태’가 ‘국가기념일’로 바뀌었지만 일부 세력들의 5·18 왜곡·폄훼가 도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 재판을 통해 드러난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더 이상의 가짜 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운영중인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제보 게시판’에는 232건의 왜곡·폄훼 제보가 올라온 상태다.

매일 3건 가량의 블로그·유튜브·댓글 등 온라인상의 왜곡·폄훼 영상에 대한 제보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게 재단측 설명이다.

재단측은 지난 8월까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거나 5·18 유공자를 비하하는 왜곡·비방 동영상 114건을 삭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유튜브를 비롯, SNS 상에는 왜곡·비하·폄훼 영상들이 여전히 퍼날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용도 ‘헬기사격이 없었다’, ‘시민군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 ‘5·18 때 광주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가 살아남아 훈장을 받았다’는 근거없는 주장들이 대부분이다.

5·18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내용도 여전하다. 평범한 광주시민을 ‘광수’(광주 북한특수군)로 지칭하는 영상, 5·18유공자 유족들에게 국가고시 가산점(10%)을 줘 수만 명의 자녀들이 공무원 취업기회를 싹쓸이했다’는 허위 사실도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5·18 기사에 달리는 왜곡·폄훼 댓글도 꾸준히 생성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군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탈북작가의 유죄 판결 기사에는 ‘항상 지역차별 운운하는 것들보면 죄다 홍어’, ‘왜곡? 총·칼·폭탄들고 민주화 운동했다는 게 왜곡이냐? 폭동이지’ 등의 댓글이 달렸고 5·18 시민군 동상 제막 기사에는 ‘1번 광수 동상을 만들어 세우겠다고, 실물은 북한에 있잖어’ 등 지역 비하 댓글도 넘쳐난다.

네이버 댓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왜곡·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들은 사회·정치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전라도를 비하하고 5·18을 왜곡하는 댓글을 올리는 실정이다.

5월 단체 등을 비롯,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예정된 전씨의 재판을 계기로 더 이상의 왜곡·폄훼 세력들의 가짜뉴스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진실 알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헬기 사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이뤄질 경우 헬기 사격의 진실 뿐 아니라 시민들을 향한 공중 사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민군에 맞선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발포였다는 전씨 측 주장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두환 재판을 계기로 5·18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더 이상의 왜곡·폄훼 세력들의 허위 주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청연메디컬그룹 사기 혐의 본격 수사 착수

개인 채권자들 고소도 시작
광주경찰, 편취 여부 조사
추가 고소 예고 속 지역사회 술렁

경찰이 청연 메디컬 그룹의 사기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청연메디컬그룹 관계사인 청연홀딩스·씨와이·청연인베스트먼트 채권자만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관계사 대표 등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채권자들의 고소도 시작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청연한방병원 대표이사 A씨에게 거액을 빌려준 뒤 돌려 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이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지역사회에 알려진 내용을 파악하는 내사 단계를 벗어나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채권자는 5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앞에 갚겠다고 해놓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사기 혐의로 고소된 점에 주목,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지역 경제·의료계 안팎에서는 2008년 청연한방병원이 문을 연 이래 A씨가 오랜 기간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지역 유력 자산가들과 인맥 관계를 형성해왔다는 점을 들어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채권자들의 고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연메디컬그룹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을 내면서 드러난 200명이 넘는 금융권 등 관련 채권자들 외에 개인적으로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받지 못했다는 추가 고소도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A씨가 돈을 빌린 채권자들에게 초기에는 연 10% 이상의 이자를 지불한 점을 고려하면, 갚을 의도가 없으면서도 고리로 유인해 돈을 빌렸는 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청 지능범죄수사대도 남부서로 접수된 고소 사건을 인계받아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한편, 추가 사건에 대해서도 지방청 중심의 수사를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광주청 주도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추가 고소 사건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돈 벌게 해주마’ 전남 지적장애 여성들 꾀어 파주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조폭 일당 검거

전남지역 지적장애 여성들이 조직폭력배에 의해 성매매 업소에 공급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전남지역 조직폭력배 일당을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경기도의 성매매 업소들에 공급한 혐의(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로 붙잡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일당이 지적장애 여성들을 유인해 파주 용주골에 돈을 받고 넘겼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피해 여성중 지적장애가 있거나 지적장애로 의심되는 인원은 3명이며, 이들은 지난해 4·6·7월 세 차례에 걸쳐 용주골의 성매매업소 선불금을 떠안고 넘겨졌다.

이 여성들은 전남지역에서 노래방 도우미 등으로 일하던 여성들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수백㎞ 거리의 경기도 파주 용주골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들은 남성 3명에 의해 렌터카로 이동했고, 남성들은 조직폭력배의 ‘보스’ 격인 A씨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공급한 대가로 소개비로 건당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소개비 외에 경비 명목으로도 한 사람당 50만원씩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검거·송치 인원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성희롱 논란’ 목포시의원 제명 취소 판결

법원 “절차상 하자”…의원직 복귀

법원이 동료 의원 성희롱 논란을 빚은 목포시의원의 제명 처분과 관련,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 목포시의원 A씨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직권으로 상고심 확정판결 때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A씨가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7월 A씨가 자신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모 여성 의원의 진정서가 접수된 데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 제명을 의결했다. A씨는 법원에 제명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재적의원 대비 의결정족수가 미달한다.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제명 표결 절차 과정에서 재적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가 나왔는데, 피해 의원은 제척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14명이 찬성해 3분의 2에 미달했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제명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목포시의회의 의결정족수는 15명이다.

재판부는 “피해 의원은 A씨 제명 안건의 직접 이해관계자로 제척 대상에 해당해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A씨는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경선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이석형 예비후보 징역 6개월 구형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금지된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 심리로 열린 민주당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의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명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3명)이나 벌금 100만원(4명)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등은 올해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석형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후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예비후보가 재심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석형 후보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이석형 후보의 공천을 무효로 하고 이용빈 후보를 공천자로 다시 결정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1219	1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50, 102동 6층 603호 [우성팰리스힐] 84.8047㎡	아파트	315,000,000 315,000,000	
[대지/임야/전답]					
2019타경 3004	6	완도군 신지면 신상리 35-25 988㎡	답	9,188,400 9,188,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묵답
	7	동소 35-27 899㎡	답	7,102,100 7,102,1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유지
	8	동소 26-20 539㎡	답	5,012,700 5,012,7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묵답
2019타경 50505	1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산114-1 3292㎡[현황전]	임야	27,652,800 27,652,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2020타경51719[중복]
2020타경 1004	1	해남군 마산면 장촌리 113 973㎡[매각제외제시외판넬지붕단층기계실1동[간이상수도시설]소재]	전	19,035,000 19,035,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72 296㎡	전		
2020타경 1059	1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116 1147㎡[연고자미상분묘소재]	전	8,143,700 8,143,7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1103	1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828 1557㎡[연고자미상분묘소재]	전	6,695,100 6,695,1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1240	1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1080 902㎡[매각제외제시외철파이프비닐하우스소재]	전	2,435,400 2,435,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1288	1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372 1944㎡[공유자정처례지분3/13전부,공유자김용기,김정숙,김정순,김영용,김영범각지분2/13전부]	전	16,190,800 15,940,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연고자미상분묘소재,분묘주변조경수목매각제외
2020타경 1370	1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산70-3 6446㎡	임야	354,530,000 354,530,000	현황전
	2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8-1 802㎡	전	24,862,000 24,86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135 899㎡	전	14,384,000 14,38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동소 152-26 752㎡	전	12,032,000 12,03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0타경 1516	1	완도군 노화읍 충도리 56-8 139㎡	잡종지	11,255,940 11,255,940	일괄매각.목록1현황도로.목록2연고자미상분묘소재
		동소 산63-1 9719㎡[공유자윤현옥지분3/9전부]	임야		
		동소 산83 5950㎡[공유자윤현옥지분3/9전부]	임야		
2020타경 50501	1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 724-26 632㎡[현황대지]	임야	7,377,400 7,377,400	일괄매각.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연고자미상분묘소재
		동소 724-27 78㎡[현황전]	임야		
		동소 724-28 768㎡[현황전]	임야		
2020타경 50570	1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149-6 2374㎡	답	47,327,800 47,327,8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50-5 1325㎡	답		
		동소 150-6 1675㎡	답		
2020타경 50648	1	진도군 고군면 내산리 460-3 132㎡	대	14,674,000 11,261,8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동소 460-2 517㎡[물건번호1:최저매각가격은제시외건물소재로인해제한받는가격]	전		
2020타경 50716	1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689 757㎡[연고자미상분묘소재]	전	9,841,000 9,841,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50723	1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278 1045㎡[매각제외이동가능한컨테이너박스2동소재]	답	31,350,000 31,3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휴경전
	2	해남군 송지면 해원리 678 714㎡	답	5,854,800 5,854,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휴경전
2020타경 50747	1	완도군 노화읍 방서리 산99 3648㎡[연고자미상분묘소재.일부현황주택건부지,전,묘지,도로]	임야	4,377,600 4,377,600	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2020타경 50808	1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1695 1944㎡	답	25,077,600 25,077,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0타경 50488	1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402 128㎡	근린시설	184,663,000 184,663,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24번길 11-1 1층 91.41㎡ 2층87.69㎡ 제시외 주택 65.3㎡ 옥상소재	사무소,점포,주택		
[기타]					
2020타경 254	1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588 1782㎡ 제시외기계기구 외 5식	양어장	297,198,444 297,198,444	일괄매각.제시외건물및기계기구포함,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목록참조
		동소 1588-1 1331㎡	양어장		
		동소 1588-1 [양어장,전복양식장] 569.64㎡ 부속건물 양수장8.16㎡ 제시외 창고 등 52㎡[1588-1,1588-9양지상아닌현황1588-1소재,부속건물중양수장소재불명,일부기계기구[양수시설의일부]공유수면및타지상소재,기계기구중양수기60hp75hp교체,양수기소재하는기계실타지상소재,제시외기계기구양수시설및축양장목록2및타지상소재]	축사		
		동소 산269-6 920㎡	임야		
		동소 산269-8 619㎡	임야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0. 12. 14.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0. 12. 21.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조길호